

산업자원부, 下半年 5大 중점시책 추진

월드컵 이후의 실물경제 정책방향

지난 6월 28일 산업자원부 장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 윤계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에서 기업 임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월드컵 이후의 실물경제 정책방향'의 제목으로 조찬 강연을 하면서 산업자원부가 추진할 '하반기 5大 중점시책'을 발표하였다.

1. 수출·투자 회복 극대화로 지속 성장기조 정착

월드컵 결과에 상응하는 수출역량의 획기적인 강화로 2002년 9월중 세계일류상품 80개 품목을 조기에 추가 선정하여 금년내 300개를 달성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비즈니스 사절단을 축구 열기가 높은 유럽과 중남미지역에 집중 파견하여 「환율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선진국 조달시장 진출과 지식서비스 산업(SI 등)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수출 원동력으로 창출하였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투자 정책 전개로 월드컵 초청 다국적 기업 CEO(54명)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Mirant(민자발전소 건설) 등 개별프로젝트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IT·BT·ET·NT 등 신기술분야 및 부품·소재 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상 지원 확대를 협의 추진하였다.

2. 세계일류 산업화를 위한 비전과 발전 전략 추진

업종별 2010년 발전비전 및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2010년에는 3만불 소득수준의 일류강국 실현을 위한 6%대의 장기성장전략을 마련 중이다.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기술·고생산성·고부

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주력기간산업의 80대 전략기술개발 지원(2003~2007년, 9000억원), 첨단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업종별 「산업발전 장학기금」 조성, 「CEO 공학교육지원단」 사업 확대 등 24개 산업기술인력 수급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국 생산성추진대회(2002.7.5일), 중소기업 CEO 혁신교육(2002년 1만명 목표) 등을 통해 기업경영혁신 마인드를 제고하며, 차세대 중대형 부품소재 및 Global Sourcing 가능성이 높은 핵심부품·소재 개발을 집중지원(2002년 하반기 120개 과제 920억원)할 계획이다.

표준의 선진화, 6대 생산기반산업 기술혁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일류 선진산업 도약에 필수적인 산업기초의 up-grade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민간표준 개발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민간표준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국가표준의 국제부합화율을 제고(2002년 5월 68% → 2002년 12월 83%)한다.

금형, 열처리 등 생산기반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2003~2010년간 2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3.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 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9월)하여 에너지절약 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이 큰 2~3개 중·대형 기술개발사업을 추가 발굴, 지원하며, 기업 스스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이행하는 자발적 협약(VA) 체결 확대로 2002년 상반기 466개에서 하반기 506개로 증가하였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분

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법의 입법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의 도약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제도를 특정 지역에 적용하여 「세계수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영종도, 송도, 김포 매립지를 하나의 경제특구로 통합, 지정·개발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업경영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진입부터 퇴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입지, 회사제도, 기업지배구조, 준조세, 퇴출제도, 환경 등 15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개선 추진중에 있으며, 한·중·일 정상회담(2001년 11월)에서 합의된 3국간 민간 협의체인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을 10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5.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추진

「포스트월드컵대책」(6. 26. 경제장관 간담회)의 보완·발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월드컵의 응원열기가 선진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현장의 동력과 분위기('Can Do' Spirit)로 연결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하였다.

- ※예시) ·국가 브랜드 제고
-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
- 산업의 생산성 배증 분위기 확산

산자부, 경제 5단체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포스트 월드컵 기획단」(단장 산자부 차관)을 구성하여 월드컵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대책을 발굴하고 확정된 대책을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 추진하였다.

- ※예시) 민관 합동의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 파견 등

2002년 5월중 전력소비량 작년 5월보다 9.0% 증가

2002년도 5월중 전력소비량은 223억kWh로서 작년 5월보다 9.0% 증가하였으며, 1~5월 누계는 작년보다 9.4% 증가하여 수출 증가(5월 수출 6.9%)로 산업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등 일반용 전력의 소비증가(12.1%)하였다.

용도별로는 산업용이 전체 소비의 57.4%인 128억 kWh를 소비하여 작년 5월보다 7.4% 증가하였으며, 일반용 전력은 12.1% 증가, 주택용은 11.1%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16.9%), 자동차(15.4%), 조선(14.0%) 및 반도체(12.8%) 업종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2억kWh로 전체의 36.9% 점유하였다.

금년 5월중 전력소비량은 223억kWh로서 작년 5월에 비해 9.0% 증가하였으며, 1~5월 누계는 작년에 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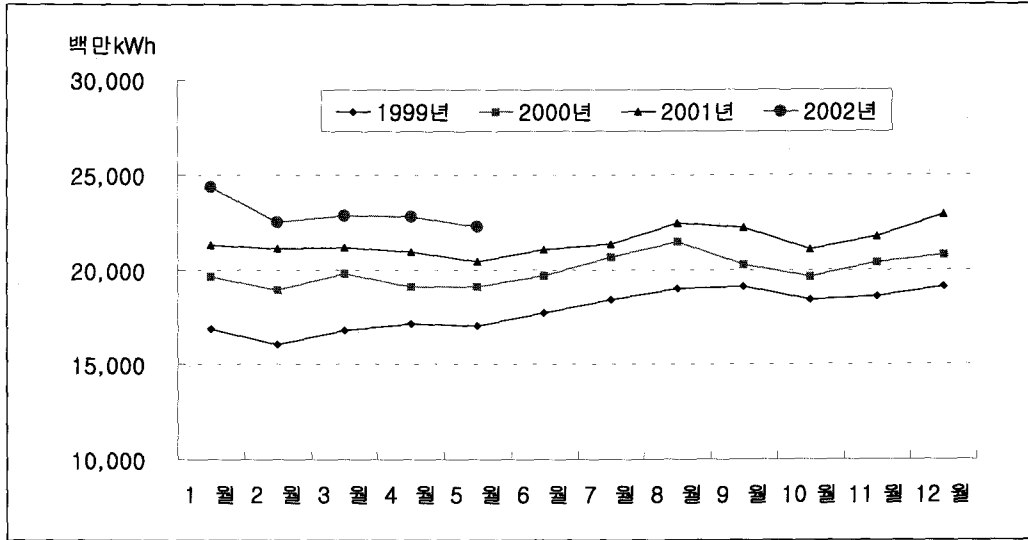
9.4% 증가하였다.

산업용은 수출주도품목인 기계장비(16.9%), 자동차(15.4%), 반도체(12.8%) 및 조선(14.0%)업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용은 공공용(13.0%) 및 서비스 업종(13.9%)의 소비 증가로 12.1%의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1~5월 전력소비 누계는 1148억kWh로 산업용, 일반용전력 등 꾸준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9.4% 증가하였다.

용도별 전력소비실적은 산업용이 작년 5월보다 7.4%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주택용 11.1% 증가, 일반용 12.1% 증가하였다.

산업용은 128억kWh(전체소비의 57.4%)로 금년 들어서 가장 많은 소비량을 나타냈으며, 이는 기계장비, 조선, 반도체 등의 전력소비가 증가한 때문이다.

- ※1~5월 누계는 616억kWh로 전년대비 7.8% 증가



〈최근 3년간 전력소비 실적〉

주택용은 44억kWh를 소비하여 전체의 19.7%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 아파트는 13.6% 증가하였으나, 일반주택이 6.3%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11.1% 증가하였고, 일반용은 43억kWh를 소비하여 전체의 19.2%를 차지하였으며, 공공용(13.0%) 및 서비스업(13.9%)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용은 8억kWh를 소비하여 전체의 3.7%를 차지하였으며, 작년 5월 대비 7.7% 증가하였다.

〈용도별 전력소비 실적〉

(단위 : GWh)

연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합계
2001년 5월	3,955	3,817	11,899	765	20,435
2002년 5월	4,394	4,277	12,784	824	22,279
증가율(%)	11.1	12.1	7.4	7.7	9.0

업종별 소비실적은 기계장비, 자동차제조, 반도체, 조선업종 등 수출 주도형의 산업용과 서비스업 등 일반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신발제조 및 담배제조업종은 감소하였다.

〈주요 업종별 전력소비 실적〉

(단위 : GWh)

연월	기계장비	자동차	조선	반도체	화학제품
2001년 5월	368	621	178	851	1,659
2002년 5월	430	717	203	961	1,664
증가율(%)	16.9	15.4	14.0	12.8	0.3

지역별로 소비량은 수도권이 82억kWh로 전체 소비의 36.9%, 부산·경남지역이 44억kWh로 29.7%를 점유하였다. 지역별 소비증가율은 수도권(9.6%), 부산지역(9.8%), 충청지역(10.3%)의 증가율이 높고 호남지역(3.2%)의 증가율이 낮았다.

〈지역별 전력소비 실적〉

(단위 : GWh)

연월	수도권	강원 지역	충청 지역	호남 지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2001년 5월	7,497	891	2,506	2,509	2,879	3,999	152
2002년 5월	8,216	982	2,764	2,591	3,165	4,391	171
증가율(%)	9.6	10.2	10.3	3.2	9.9	9.8	12.7
점유율(%)	39.6	4.4	12.4	11.6	14.2	19.7	0.8

2002년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 발표

최대전력수요 4610만kW, 예비율 13.6% 전망

금년 여름철의 최대전력수요는 전년(4313만kW) 대비 6.9%(297만kW) 증가한 4610만kW(이상고온시 4791만kW)로 전망되며, 공급능력은 전년(4870만kW) 대비 7.6%(369만kW) 증가한 5239만kW를 확보하여, 전력공급 예비율은 13.6%(이상고온시 9.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연중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여름철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과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도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 따르면 금년 최대전력수요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4610만kW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그 중 냉방으로 인한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8.2%(71만kW) 증가한 931만kW(총 수요의 20.2%)로, 이상고온현상이 발생할 경우는 냉방수요가 1112만kW까지 상승하여 최대전력수요가 4791만kW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산업자원부가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추진해 온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 대책을 보면 전력공급능력은 영광원자력 5호기, 태안화력 5·6호기 등 12개 신규 발전설비 348만kW를 준공하고, 자가용 발전설비의 잉여전력 구매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전년(4870만kW) 대비 7.6%(369만kW) 증가한 5239만kW로 확대하였으며, 금년 5월말에 국내 최초로 765kV 송전선로(신서산~신안성)를 준공하고 2개의 변전소를 신규 준공하는 등 송·변전 설비도 확충하였다.

또한, 최대전력수요를 낮추기 위하여 7~8월중 전력수요가 많은 기간에 「휴가·보수기간 조정지원제」 및 「자율절전 지원제」를 실시하고, 축냉식·가스식 냉방설비

및 고효율 조명기기 등 절전기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226만kW의 전력수요 절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 대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금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전력공급 예비율은 13.6%(예비전력 629만kW)로 전망되었으며,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력공급 예비율이 9.4%(예비전력 448만kW)로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한편,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거나 대형 발전설비의 고장 등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 대비해서 석탄화력발전기의 출력을 상향 운전하고 비상시 수요관리 조치를 통하여 170만kW의 비상전력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7월~9월 중에 산업자원부 내에 「전력수급대책본부」(본부장 : 자원정책실장 김동원)를 구성·운영하고, 한전에 전력거래소·발전회사 등과 합동으로 「비상수급대책반」(반장: 한전 부사장)을 구성·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 및 전기소비절약을 위한 홍보 대책으로 TV·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물

(2002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단위 : 만kW, %)

구 분	2001년 실적(a)	2002년 전망		증감(b-a)
		정상기온시(b)	이상고온시	
설비용량	4,963	5,280	5,280	317
공급능력	4,870	5,239	5,239	369
최대수요	4,313	4,610	4,791	297
(증가율)	(5.2)	(6.9)	(11.1)	
예비전력	557	629	448	72
(공급예비율)	(12.9)	(13.6)	(9.4)	

*설비용량 및 공급능력은 최대전력수요 발생시점 기준

론, 민간단체와 5만여명의 청소년봉사단을 활용하여 전기 소비절약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전기설비 사고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정전사고 복구 및 비상발전기 가동에 대한 신속한 기술지원 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원전 설계코드 기술 워크숍 개최

원전기술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코드 기술자립 추진

산업자원부는 “원전기술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전 설계코드 국산화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 산자부, 한전, 한수원 등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의 설계코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설계코드 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외국의 기술수준을 뛰어넘는 국산 설계 전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바람직한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원전 설계코드 국산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한국표준형 원전에서 사용되는 핵심코드는 미국이 개발한 코드로서 미국 정부가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바, 기술 사용협정이 만료되는 2007년 5월 이후에는 신규원전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상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기술중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한국표준형 원전에 있어서 우리의 기술수준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수행능력 (한국표준형 원전)
설 계	• 독자 수행 가능(KOPEC) • 단, 일부 핵심 설계코드는 미국(CE형)코드 활용
제 작	• 주기기 : 계측제어 등 일부분야 제외 대부분 제작가능(두산) • 보조기기 : 일부 특수기기 제외 국내 제작가능(100여개 업체)
시 공	• 독자 수행 가능(6~7개 시공업체)
시운전	• 독자 수행 가능(한수원)

원전 설계코드 기술은 크게 코드운용기술과 코드개발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코드운용기술은 설계코드를 사용하여 적절한 설계절차에 따라 원전을 설계하는 기술이며, 코드개발기술은 설계코드 자체를 개발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코드개발기술이 코드운용기술 비해 훨씬 더 원천적이며 기술자립이 어려운 분야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설계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코드운용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운용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코드개발기술 측면에서는 아직도 외국의 코드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설계코드 국산화를 위해 2001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86억원을 투자하여 미국 정부가 제한하는 핵심코드를 대체할 설계코드를 개발하여, 2007년 이후에는 원전 설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 과제는 핵설계 및 안전해석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한전, 한수원(주), 한전기공(주), 한국원자력연료(주) 등 산업계와 원자력연구소, 서울대 등 학계 및 연구계가 총망라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설계코드 국산화는 지난 99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원전 건설 및 운영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원전기술 고도화사업”(1999~2006)의 중점 추진분야 중 하나이다.

전기사업제도 중간종합 언기

일본, 전력 에너지청 견해 차이로

앞으로 전기사업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총합자원에너지사회·전기사업분과회의 중간종합이 9월 이후로 늦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차회 7월 25일의 제11회 회합에서는 전력거래소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든가 원자력, 분산형전원 등에 대하여 의논할 예정이지만 네트워크 비용의 부담방향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의견이 다르며, 전력회사측과 사무국인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의 견해차도 크다. 또 중간종합 이후의 의논진행방법을 둘러싸고도 관계자의 생각이 교착되어 있어 가을 이후의 행방은 예측할 수 없다.

4월부터 앞으로의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는 전기사업분과회는 전회까지 다섯 번의 회합을 가졌다. 지금까지 소매자유화 범위, 광역적인 전력유통, 전력계통의 운용률, 공급력 확보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 회합에서도 남겨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우, 의견이 잘 맞지 않고 견해가 대립하는 안건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체요금제도에서 오는 팬케이크 문제를 둘러싸고는 팬케이크 구조의 해소를 표방하는 사무국과 연계설비뿐만 아니라 전원

선이라든가 자영선 등도 포함하여 네트워크 전체의 코스트 부담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의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력과 생각이 정면으로 상충되었다.

전기사업의 본질에 관련한 안전인만큼 중간적인 결론을 찾기 힘들다는 사정도 있다.

이 때문에 다음 25일의 회합에서 지금까지의 의견을 정리하기는 곤란한 상황으로 중간종합은 9월 이후로 늦어질 것이 확실하다.

또 중간종합을 한 후 의견 진행방법에서도 관계자의 생각이 교착한다. 지금까지도 분과회에서 토론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어서 워킹그룹 등에 토론의 장을 마련토록 요구하는 의견이 강해지는 한편 에너지청은 지금으로서는 자유화 스케줄에 관하여서만 워킹그룹을 설치할 생각으로 가을 이후의 토론방법에 대하여는 불투명하다.

에너지청은 내년의 통상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나 앞으로의 의견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재운번정전 위기

작년에 운번정전을 당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력수급이 다시 악화되어, 주 독립 계통운용자(ISO)가 거의 1년만에 경고를 발하였다. 서해안

지역에 열파가 내습하여 기온이 상승, 피크수요가 증대된데 대해 인접주로부터의 전력조달이 곤란해지고 주내 발전소 트러블로 공급력이 손상된 것이 원인이다. 지난 11일에는 공급예비율이 5% 떨어졌을 경우에 공급차단 가능한 수용가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는 「스테이지2」가 발령되었다.

전력위기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수용가의 절전의식도 희박해지고 있는데 공급력 부족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상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주 미국 서해안에서는 북부의 오레곤으로부터 남부의 아리조나주에 이르기까지 맹서가 닥쳐 기온이 40℃에 육박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수도인 새크라멘토 등에서 평균기온을 대폭 상회하여 건조수요 등이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전력수요가 급격히 팽박, 10일에는 ISO가 1년만에 스테이지(스테이지는 공급예비율이 7%를 하회하였을 경우에 절전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발하는 경고)를 발령하였다.

ISO 1년만에 경고

열파로 피크수요 증대, 공급력 부족은 개선되지 않고 11일에도 2일 연속하여 같은 레벨의 경고를 발하였지만 수요상황이 더욱 심해져서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인 스테이지2로 바뀌었다. 이날의 피크수요는 약 4300만kW,

원래 캘리포니아주는 주내의 공급력 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주의 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데 서해안 전역에서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인접주로부터의 전력조달이 곤란해진 점과 10일에는 220만kW의 전원이 트러블로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이 수급을 압박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유화의 제도 설계 실패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번의 윤번정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기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 수용가의 절전 의식이 회복해진 한편, 인구 증가 등으로 수요는 완만하진 않지만 여전히 확대 추세에 있다. 이번에는 윤번정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

유럽전기사업연맹 연차대회

유럽 자유화추진에 의견일치

•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

지난 6월 24~25일 유럽전기사업자의 횡적 조직인 유럽전기사업연맹(EURELECTRIC) 연차대회가 독일·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어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이 회의는 독일전기사업자연맹 주최로 열렸는데 라이프치히가 개최지로 선택된 것은 주최자측에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실제로 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라이프치히 거리는 구동독 시대의 집합주택, 상점가 등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공항, 대 회장이 된 메세시설, 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통일 이후에 건설·개수된 인프라에 충만한 이 거리가 몰라볼 정도로 변모를 이루었다.

• 전기사업은 다국적·멀티 에너지 산업으로 변모

그러나 라이프치히 거리 이상으로 요사이 10년간 변모한 것은 유럽의 전기사업이다. 개최인사에 나선 EURELECTRIC의 비어호후 회장은 「현재 에너지시장을 형성하는 큰 흐름의 하나는 전기, 석유, 가스, 서비스분야의 수렴이다. 그것은 M&A 물결의 숨은 추진력이 되어 종래 전기사업의 이미지를 바꾸어 다국적·멀티유틸리티·비즈니스라 할 수 있는 것을 출현시키고 있다」 라고 한다.

• 지금까지의 자유화 총괄과 장래에 대한 논의

「세계적인 에너지 자유화=배워야 할 교훈을 토대로」를 테마로 한 금년의 대회는 그 변모된 모습을 검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탐색한다는 것으로 제1부 「선행예=배운, 배워야 할 교훈」에서는 각국에서의 선행예가 소개되고, 이어 제2부 「에너지와 시민」에서는 각국의 상황 및 「공익성과 경

쟁」 그리고 「자유화시장에서의 에너지·시큐리티」를 표제로 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제3부에서는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주제로 전기사업의 장래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 앞으로도 자유화는 계속

선행예에 대한 의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에 주목이 모아졌다. 다만, 비어호후 회장의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는 자유화의 평판을 나쁘게 하였으나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자유화가 계속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에너지시장 자유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2~3년 이내에는 전력·가스의 「범유럽시장」이 출현될 것이다」라는 발언과 같이 전반적으로는 자유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 메리트를 평가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 규제나 공익성에서는 이론도

그러나 규제의 방향(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전기사업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시장메커니즘만으로는 전기사업의 공익성은 확보되지 못하며 적당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잉규제·정부 개입이나 공익성의 추구는 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의견이 있어 격렬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개입 필요론」으로는 프랑스전력공사 간부가 「장기적인 시설투자를 무시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는 전력회사가 많은데 이것은 전력부족

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진자(振子)가 너무 경쟁쪽으로 지나치게 흔들이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 간부는 「에너지·시큐리티 확보에는 타임리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시장은 자금 조달의 파워풀한 도구이긴 하나 완전한 회답은 아니다. 시장설계, 연료선택, 필요한 경우 개입 등 정부의 역할은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대의 관심사인 EU전력·가스자유화지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유럽위원회 간부는 개정안에서 「자유화 촉진 외에 에너지·시큐리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나아가서는 저소득 수용가에의 세프티넷 등, 전기사업의 공익성을 규정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 과잉 정부 개입·공익성의 추구는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의견도

이에 대하여 「정부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의견은 독일관계자라든가 가스관계자로부터 많이 나왔다. 독일 최대 E·ON사 간부는 「정부가 공익성의 이름 아래 환경세, 재생가능에너지나 코제너레이션의 강제 매수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EU지령 개정안에는 저소득 가중용 수용가에 대한 보조를 요구하는 조항도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의 기업이지 교회는 아니다」라고 심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또 유럽가스연맹 간부는 공적일반

이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위원회, 각국 정부가 그와 같은 이름 아래 규제할 자격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독일관계자로부터는 당사자간의 교섭으로 결정하는 독일의 독특한 액세스요금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네트워크부문의 법적분리(별회사화)를 성급하게 요구하는 유럽위원회의 자세에 강하게 요구하는 안을 냈다.

이와 같이 이번 회의는 유럽의 자유화 논의가 자유화촉진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규제나 송전부문의 방향, 송전요금제도 등 각론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론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DOE와 기술협정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外門一直 이사장)는 11일 고레벨 방사성 폐기물의 지하 처분에 대하여 미국에너지성(DOE)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폐기물을 매설하는 지하에 대한 조사라든가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에 관한 공동연구와 정보를 교환한다.

• 처분장 설계 등 대상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필 연료를 재처리한 후에 남는 고레벨 폐기물은 방사능이 약해질 때까지 1만년 이상이 걸려 생활환경으로부터 충분히 멀리하여 처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자력

발전환경정비기구는 폐기물을 깊은 지하(깊이 300m 이상)에 매설하는 「심지층처분」의 실시 주체. 현재 처분지 선정에 대해 자치체의 공모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DOE와 교환한 협력협정에 따르면 지층의 특성평가라든가 인공배리어의 공학기술, 처분장의 설계, 건설, 조업과 폐쇄에 관한 공학기술, 시설 사이트 선정에 관한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 교환, 시설방문, 공동연구, 인사교류를 한다.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다.

DOE는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고레벨 폐기물 처분장의 개발 주체가 된다. 다만, 미국은 일본과 달리 사용필 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고레벨 폐기물로서 지하에 그대로 처분하는 완스루 방식을 채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처분지로서 네바다주 욱카마운틴 지하에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앞으로 DOE는 욱카마운틴 지하에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허가신청서를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제출하여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처분지의 건설, 운영 등 총 사업비는 575억불(약 6조 9천억엔)로 산정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국내 처분지의 선정작업 등을 앞으로 추진해 간다.